

# 일반공공행정 담합·보복에 3배 손배소...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도 책임

내년부터는 담합이나 신고 후 보복조치를 당한 업체가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실손해액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9월19일부터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일반공공행정 제도'를 살펴봤다.

## ◇가맹점주, 본부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책

**임 묻는다** = 가맹본부 임원이 잘못을 저질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매출 급감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가맹계약서 상에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행위에도 3배 손배소 도입** = 대형납품업체의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보복행위,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네 가지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손해액만 100만 원 이상이면 배상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체 적용**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체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임대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월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 도입**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는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딱 한 번이라도 고발조치를 받으면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유형 추가** =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납품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만 보복조치 제재대상이었다.

**◇가맹·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받는다** = 가맹본부와 대리점본부의 분쟁조정이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지게 된다. 이 지자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각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지금까지 점주들이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가까운 지역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또 수도권 소재 가맹본부들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확대된다.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 등이 추가된다.

# 국방병무보훈 최전방 부대 동계패딩 보급... '짬밥' 편하 급식의 질도 대폭 개선

국방부가 내년부터 군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전방 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고, '짬밥'이라고 폄하되던 급식의 질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방·병무·보훈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 ◇국방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를 보장한다. 육군 전방부대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 부대 등 격오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된다. 춘추온 등복은 기존 1벌에서 2벌로 늘어난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속옷도 각 6매에서 각 8매로 늘린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으로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의무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급식 시기는 부대별 운영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1 기준 182~245만원)인

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이 6~48개월로 원하는 만큼 연장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개선된다.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징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봉급이나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도 바뀐다. 일제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현병은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된다.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바뀐다.

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자 유족을 위해서는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나 집단 폭행 및 왕따 등의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

부 변호사가 피해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해 피해자 인권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는 전사·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로만 한정했던 특별징급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으로 헌신한 군인 모두에게 특별징급 기회가 주어지도록 아전지휘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부사관 징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해 징급 최저 복무기간에 도달한 사람은 징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한다.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되므로 징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면 징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다.

**◇병무**

내년부터는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1월 입영대상자부터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이라는 이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로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된다. 졸업예정 사유자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가계를 책임져야 할 병역의무자가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재산액 6880만원 이하, 월 수입액 184만5414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된다. 재산 기준과 소정의 부담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동안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대구에 있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새해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5000명을 추가 배정한다. 주요 배치 기관은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 등에 3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

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시 숙박비를 공무원 예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통일된 디자인과 문구를 담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준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묘역 전담 관리자를 뒤 상시 점검과 별초·묘역 훼손 복구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호와 임시헌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날을 기념일로 했다.

# 농업·식품 맹견 목줄 안매면 300만원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3km

내년부터 맹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단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가 반경 500m에서 3km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만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으며, 이때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 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에는 소유자 등의 없이 격리조치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각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및 농업정책보험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연금 보험료의 절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13650원까지 지원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가지를 추가하고 영세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인다.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농지매입비축 사업도 신청 가능해진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 내년 2월부터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경영체에게 포획트랩 설치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40%씩 매칭해 지원한다.

**◇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 농가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된다. 단 지형적·역학적 요인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방역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통한 유통 의무화** = 내년 4월 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썬)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GP 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 = 소득 불안정과 같은 열악한 전수여건 탓에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명인에게 전수 활동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식품명인 명칭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한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한다. 현재는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인정하고 있다. 동력에 취기의 연간 공급량도 52.5.1에서 75.0.1로 늘린다.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및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정일 공간 지원** = 귀농·귀촌 신

혼부부와 1자녀 이상 양육가정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규모로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 4동(지구당 1개동)과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4동(지구당 1개동)도 만든다. 농촌 유희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개발 및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 내년 2월부터 혁신적 식품이지만 국내 개발 수준이 미흡한 제품군에 대해 25억원, 기존 화학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첨가물 개발에 29억7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공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식품 우수 기술에 대해 구매를 원하는 기관으로 중개해 이전시키고 기술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해양·수산 낙후된 어촌 300곳 탈바꿈 '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 해양공간계획 도입

내년부터 낙후된 어촌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어촌뉴딜 300'이 본격 추진된다.

또 바다의 특성을 평가해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 및 법령'을 발표했다.

**◇낙후된 어촌 재생... 어촌뉴딜 300** = 어촌 뉴딜 300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조망 300여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70곳을 선정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해수부는 사업비로 개소당 평균 100억원, 총

7000억원(국비 70%·지방비30%)을 투입한다. 우선 내년부터 국비 172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소규모 어촌·어항의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양산업 지원 '해양 모태펀드' 조성** = 정부는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 모태펀드'를 신설한다.

해양 모태펀드는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던 한국모태펀드에 '해양 계정'을 포함시킨 것이다. 첫 사업연도인 내년에 총 260억원(정부 200억원·민간 6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300억원(정부 10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규모로 펀드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친환경선박 건조 및 해양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이다. 또 해양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전통 해양산업,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바다의 백년대계... 해양공간계획 도입** = 내년부터 바다의 특성을 평가해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된다.

올해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점식으로 무분별하게 바다를 이용하는 대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바다를 이용·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관리 범위를 연안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외해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어업 및 골재·광물, 환경, 항만 등 9개의 해양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대출이자·보조금 지원** =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선박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선박연료에 들어 있는 황 함유량을 현 3.5%에서 0.5%로 대폭 낮춰야 한다.

정부는 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지원한다.

또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권리 강화... 수산물이력제 도입** = 굴비와 생굴은 유통 과정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두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고, 생굴

은 생산과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보다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한 이후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확대 지원**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생계가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원~200만원에서 50만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